“기업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권력 개입”

2野 비선실세 개입 의혹 공세
노웅래 “이사회 사전심의 생략”
김영주 “하루만에 법인허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26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특혜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맞아 두 재단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내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민주 노웅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이사회 규정까지 어겨가며 거액을 출연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포스코는 미르재단에 30억원을 출연하면서 사전심의 없이 2015년 11월 6일 개최된 이사회 의결만으로 출연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KT의 경우 이사회 규정을 통해 10억원 이상 출연·기부할 경우 이사회에 부의하게 돼 있지만, 이사회 의결 없이 출연이 이뤄졌다”고 지적한 뒤, “삼성물산 역시 15억원의 출연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기업들이 계열사들로부터 ‘쪼개기’ 형식으로 출연금을 걷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GS는 26억원을 출연하면서 GS칼텍스, GS건설, GS리테일 등 8개 계열사에서 1억원~6억3000만원씩을 걷었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노 의원은 “약정 금액 충당을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갹출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력 실세가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경련이 기획한 사업이라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더민주 김영주 최고위원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재단이 이례적으로 빠른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2012년 이후 문화부가 설립허가를 내준 131개 법인 가운데 신청 하루 만에 허가를 받은 법인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포함해 4곳 뿐 이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그나마 나머지 두 곳은 이미 허가를 받은 후 허가증을 재교부받거나, 기존 단체를 통합한 사례였다”며 “결국 최근 5년간 설립 신청 하루 만에 허가가 난 신설 법인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밖에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재단 설립허가가 빨리된 게 불법이 아니다. 하루 만에 허가가 나온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미르재단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사업에 정부의 공식 추진 전부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이 이화여대-정부와의 연구계약 체결 이전에 코리아에이드와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사업에 착수했다”며 “미르재단이 정부보다 앞서 대통령 해외순방과 대통령 역점사업에 적극 나섰다면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두 재단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쌍둥이 괴물”이라며 “제2의 일해재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감 현장

野 “일본 10억엔 배상금이냐?”…외교장관 즉답 피해
의원들 김영란법 몸사리기…구내식당 ‘더치페이’ 점심

20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6일에는 여당의 불참으로 상임위마다 여러 가지 진풍경(?)이 펼쳐졌다. 또 ‘김영란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몸조심을 한 때문에 오찬 모습도 바뀌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해임건의안 대상인 김재수 장관에게 질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김 장관은 침묵으로 국감장을 지켰다. 업무보고는 김 장관 대신 오경태 차관보가 했으며 이준원 차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했다.

더민주 소속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장관 해임건의안이 결의된 상황에서 대표선서를 하는 것이 적합한 지 의문”이라면서 “하지만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불수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아직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선서는 장관이 대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방위**=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더민주 등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했지만, 국방위는 새누리당 소속의 김영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개회 선언도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 불참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집중 성토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국방의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기관장과 부대장 등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는데 새누리당의 국감 불참으로 인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민주 이철희 의원은 오전 11시33분께 “장관 이하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석을 강력히 촉구하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할 때까지 (장관 등은) 현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이에 1시간 이상 국감장에서 대기하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간부들도 모두 자리를 떴다.

◇**외통위**=외교부에 대한 국감도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누리당에서는 간사인 윤영석 의원만 모습을 드러냈다. 국감에서는 일본이 군위안부 지원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성격에 대한 집요한 추궁이 이뤄졌다.

더민주 강창일 의원이 10억엔에 대해 ‘배상금인지 사죄금인지 답하라’고 요구하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받아낸 것은 과거 어느 정부도 받아내지 못한 성과”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재차 “배상금으로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역시 직접적인 답 대신 “정부 예산에 의해 출연한 것은 과거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한 것과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정말 말장난할 것이냐”며 역정을 냈고, 윤 장관은 “말 장난이 아니다”고 응수했고 그 후에도 윤 장관은 합의의 의미를 거론하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의원들은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외교부 1층 구내식당에서 ‘더치페이’로 점심을 해결했다. 의원들은 갈비탕에 계란찜, 생선구이, 멸치볶음, 오이지 등 외교부 일반 직원들과 같은 메뉴로 구내식당 한 쪽에 마련된 별도 좌석에서 식사를 했다. 가격은 1인당 1만원으로 외통위 행정실이 의원·보좌관 등 국정감사단 85명분 식대 85만 원을 별도로 계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감장 나온 이승철 2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김재수 장관(오른쪽)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노인요양시설 절반이상이 관리 부실”

국민의당 천정배

노인요양시설 중 절반이상(65%)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5083곳으로, 입소자는 13만19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시설급여를 받는 3623곳의 시설 중 65%에 달하는 시설이 C(831개), D(697개), E(847개)의 부실등급을 받았다. 또한, 잠복결핵검사 집단시설에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빠져있고, 결핵 예방을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은 법적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쌀 수입 글로벌 쿼터 적용 안해 2천억 낭비”

더민주 이개호

정부가 지난해 쌀 의무 수입과 관련, 글로벌 쿼터가 아닌 나라별 쿼터를 적용해 수천억원대 부담을 가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실에 제출한 2015년 의무 수입량(TRQ) 구매 자료에 따르면 태국산 쌀의 t당 계약 단가는 438.34달러였다. 중국산은 밥쌀용이 998.39달러, 가공용이 881.91달러였으며 미국산은 밥쌀용 477.23달러, 가공용은 375.98달러였다.

정부는 2014년 9월 쌀 개방을 선언하면서 기존에 의무적으로 사주기로 하고 중국(11만6000여t), 미국(5만여t), 태국(3만t), 호주(9000여t)에 배정했던 나라별 쿼터 물량 20만5000여t을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결국 비싼 값을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

“3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 5481억원”

국민의당 권은희

행정기관이 착오로 잘못 걷은 지방세가 최근 3년 간 54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6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3~2015년간 지방세 과오납은 65만3000건, 548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행정기관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과오납 현황은 감면대상착오 322억 9900만원(9만1000건), 과세자료 착오 499억 5100만원(36만6000건), 이중부과 23억 9900만원(8000건) 등 담당 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잘못 보고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주선 휠체어 타고 등장 ‘부상 투혼’

국민의당 소속인 박주선(광주 동남을) 국회부의장이 26일 국정감사에서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는 부상 투혼을 보였다.

박 부의장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에 깁스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부의장은 “본의 아니게 지난주 토요일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해서 병원 입원하고 11시에 수술할 예정”이라면서 “첫 국감이고, 우리 당에는 둘뿐인데 양해를 구하러 왔다. 수술이 임박해 자리를 이석하는데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소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못한 질의는) 서면질의를 이용해 최대한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국감장을 떠나 병원으로 향했다. /임동욱기자 tuim@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4.7% ~ 4.9%
대출기간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